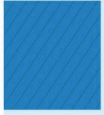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국내·외 여성통신

- 해외
- 국내



해외*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스위스의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추진 현황¹⁾

- 스위스에서는 헌법(Federal Constitution) 제8조와 남녀평등법(Federal Act on Gender Equality)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스위스의 성별 임금 격차는 17.9%로, 여성이 남성보다 시간당 약 17.9%p 정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스토니아(21.3%), 오스트리아(18.4%)에 이어 가장 크고, 유럽연합(EU) 평균 12.7%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²⁾ 본 원고에서는 스위스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의 내용과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 스위스는 2020년 남녀평등법(Federal Act on Gender Equality)을 개정하여 노동시장 내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의 조사와 보고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둔 스위스의 모든 공기업 및 사기업은 평등 임금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는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제출하고 독립적인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임금 현황에 관한 데이터는 스위스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 '로깅(Logib)'에 입력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은 고용주가 근로자 임금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구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고용주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시스템인 로깅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데이터별 익명으로 입력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기업과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 환경에 맞춘 두 가지 모듈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또한 기업은 결과를 받고 1년 내에 조사 결과를 주주 및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남녀평등법 13조는 이러한 조사 결과 공개를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 해외 여성통신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제동향 중 '해외통신원' 주요 기사를 정리한 것임.

1) 박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정치학과 강사(Lecturer)

2) 스위스는 유럽연합(EU)나 유럽경제공동체(EEA)에 가입한 국가가 아니나, 지리적으로 회원국들에 둘러싸여 있고 양자 협정을 통해 경제·사회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내 성별 임금 격차 주제를 다루는 보고서나 언론 보도에서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스위스를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다.

둔 경우 2032년 6월까지 12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도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조사 결과 임금 격차가 나타나면, 고용주는 동일임금이 실현될 때까지 4년 주기로 반드시 현황조사를 반복하여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미 임금평등을 실현한 것으로 검증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은 이후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없다.

- 스위스에는 성평등법 외에도 연방정부, 주(칸톤), 지자체(코뮌), 공기업, 정부 관련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공공분야 임금평등 헌장(Charter for equal pay in the public sector)’이 있다. 본 헌장에 가입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모든 형태의 차별 근절과 임금평등에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 표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23년 말 기준 약 160여 개의 관계 당국과 100여 개의 연방 또는 기타 국가 관련 조직 및 기업들이 이 헌장에 가입했다.
- 이 밖에도 스위스의 연방공공조달법(Federal Act on Public Procurement)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임금평등을 보장하는 기업만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의 12조는 입찰자는 남녀동등 임금에 관한 평등 대우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발주기관은 적절한 증빙 자료를 해당 기업에 요청할 수 있으며, 주(칸톤)와 지자체(코뮌)별로 공공조달 체계와 운영 관련 자체적인 요구 사항이나 세부 조건을 가질 수 있다. 연방 성평등사무소(Federal Office for Gender Equality)는 실제 공공조달 과정에서 남녀 임금 평등 요건이 지켜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연방 성평등사무소는 매년 무작위로 30건 가량을 선출하고, 만약 입찰자가 남녀 임금 평등을 실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의 처벌, 조달 수입 파기 또는 조달 절차에서 배제, 계약 종료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2024년 6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는 남녀 임금 격차에서 2023년 21위(0.783)에서 올해 20위(0.785)로 순위가 한 단계 상승했다.³⁾ 그리고 스위스 연방통계청(Federal Statistics Office)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중위 임금은 남성보다 9.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16.6%p를 기점으로 계속 하락하며 개선되어 온 수치이다. 그러나 직급별로 분류해 보면 공공 및 민간 분야의 고위급 및 중간급 직급에서 남녀 중위 임금 격차는 14.7%로 가장 높았다. 높은 직책일수록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인 문화로 인해 여성의 비율이 낮아지고 임금 격차 역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은 향후 스위스 노동시장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스위스는 법적으로 남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을 명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기업들이 조사 및 결과 제출 과정에서 편리하면서도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모듈을 다르게 개발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공공조달 관련 법과 이행 과정에도 남녀 임금 평등이라는 가치를 통합하여 적용했다는 부분도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은 94위(0.696)로, 지난해에 비해 순위가 11계단 상승했다.

• 참고문헌 •

- Euronews (2024.3.8.) "Gender pay gap: This is the only country in Europe that pays women more than men", <https://www.euronews.com/next/2024/03/08/gender-pay-gap-in-europe-how-do-countries-compare-on-narrowing-the-divide> (접속일: 2024.9.21.)
- Federal Office for Gender Equality (2023.8.25) "Charter for equal pay in the public sector", <https://www.ebg.admin.ch/en/charter-for-equal-pay-in-the-public-sector> (접속일: 2024.9.21.)
- Federal Office for Gender Equality (2023.8.25.) "Equal pay in procurement", <https://www.ebg.admin.ch/en/equal-pay-in-procurement> (접속일: 2024.9.21.)
- Federal Office for Gender Equality (2023.8.24.) "Federal Constitution and Gender Equality Act", <https://www.ebg.admin.ch/en/federal-constitution-and-gender-equality-act> (접속일: 2024.9.21.)
- Federal Statistics Office (n.d.) "Wage gap", <https://www.bfs.admin.ch/bfs/en/home/statistics/work-income/wages-income-employment-labour-costs/earnings-structure/wage-gap.html> (접속일: 2024.9.21.)
- le News (2024.6.14.) "Switzerland makes progress on gender gap", <https://lenews.ch/2024/06/14/switzerland-makes-progress-on-the-gender-gap/> (접속일: 2024.9.21.)

영국, 사적 이미지 부당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⁴⁾

- 영국 정부는 영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2023년 10월 제정된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을 재정비하고 '사적 이미지 부당 유포(Intimate image abuse)'에 대한 처벌 강화를 발표했다. 피터 카일(Peter Kyle) 기술 장관(Technology Secretary)은 온라인에서의 사적 이미지 부당 유포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사회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조장된 여성 혐오 분위기(Misogynistic culture)를 사회 전반에 퍼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온라인 안전법 강화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3년 제정된 온라인 안전법은 온라인에서 어린이와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소셜 미디어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다양한 의무를 부여해 개인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구인 오프콤(Office of Communications, Ofcom)이 해당 기업들이 법적 프레임워크를 준수하는지 평가하고,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 법의 적용 대상은 소셜 미디어, 클라우드 스토리지 및 공유 사이트, 비디오 공유 플랫폼, 온라인 포럼, 데이팅 서비스, 메시징 서비스 등 다양한 웹사이트와 앱에 해당하며, 영국 외부에 있는 기업도 영국과 연관된 경우 법의 적용을 받는다.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관련 게시물을 사전에 방지하고 삭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프콤은 해당 기업에 최대 1,800만 파운드(한화 약 317억 원) 또는 전 세계 수익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이지원,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개발보건학 석사

- 2024년 1월에는 온라인 안전법에 따라 개인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발효되었다. 처벌 대상에는 사적 이미지 무단 유포를 비롯해 자해 조장(Encouraging or assisting serious self-harm), 원치 않는 음란 이미지 전송(Cyberflashing),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기 위한 허위 정보 전송(Sending false information intended to cause non-trivial harm), 위협적인 의사소통(Threatening communications), 고의적인 선동(Epilepsy trolling) 등이 포함된다. 이 조항은 해당 행위를 저지른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며, 특히 원치 않는 음란 이미지 전송과 위협적인 의사소통은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 2025년 봄부터는 강화된 온라인 안전법에 따라, 동의 없이 사적 이미지를 공유하는 행위는 가장 심각한 유형의 온라인 범죄인 ‘우선 범죄(Priority Offence)’로 분류된다. 우선 범죄에는 극단적 성폭력(Extreme sexual violence), 불법 이민 및 인신매매(Illegal immigration and people smuggling), 불법 약물 및 무기 판매(Selling illegal drugs or weapons), 테러(Terrorism)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영국 정부는 이번 법률 강화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온라인 성범죄와 여성 혐오 게시물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영국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인 Refuge가 발간한 온라인 학대 보고서 ‘비사회적 공간(Unsocial Spaces)’에 따르면, 영국 여성 3명 중 1명 이상(36%)이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학대를 경험했으며, 특히 18-34세의 젊은 여성의 경우 3명 중 2명(62%)이 온라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 경험자의 95%는 온라인 학대가 정신 건강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으며, 이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 제스 필립스(Jess Phillips) 안전보장부 장관(Safeguarding Minister)은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은 국가적 비상사태”라며,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에 상관없이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이러한 학대를 예방하고 대응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스 필립스 장관은 소셜미디어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게시되는 내용, 이미지, 영상 등 호스팅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대부분의 학대 피해자가 무력감, 쇠약감을 경험하는 것을 고려해 피해자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 개선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적 이미지 무단 유포에 대한 별도의 법률 도입을 촉구하며, 딥페이크 생성물의 제작 및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자가 가해자와 기업에 직접 조치할 수 있는 민법 개정, 피해자에 대한 사후 지원 방안 마련 등 핵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최근 출범한 영국 정부는 2024년 8월에 극단적 여성 혐오를 테러로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조치가 사회적 인식 변화와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노동당 정부가 기존 법률을 재정비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정적 변화가 실제로 여성 혐오와 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 감소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End Violence Against Women (2024.9.13.), "Image-based abuse: no meaningful changes in government announcement", <https://www.endviolenceagainstwomen.org.uk/image-based-abuse-no-meaningful-changes-in-government-announcement/> (접속일: 2024.9.19.)
- GOV.UK (2024.1.31.), "Online Safety Act: new criminal offences circular",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nline-safety-act-new-criminal-offences-circular/online-safety-act-new-criminal-offences-circular#part-10--communications-offences> (접속일: 2024.9.18.)
- GOV.UK (2024.5.8.), "Online Safety Act: explainer",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nline-safety-act-explainer/online-safety-act-explainer> (접속일: 2024.9.18.)
- GOV.UK (2024.9.13.), "Crackdown on intimate image abuse as government strengthens online safety laws", <https://www.gov.uk/government/news/crackdown-on-intimate-image-abuse-as-government-strengthens-online-safety-laws> (접속일: 2024.9.18.)
- Refuge (2021.10.29.), "'Unsocial Spaces' - make online spaces safer for women and girls", <https://refuge.org.uk/wp-content/uploads/2022/04/unsocial-spaces-.pdf> (접속일: 2024.9.18.)

스페인, 의사결정직 성별 균형을 위한 평등법 발효⁵⁾

- 2024년 8월, 스페인은 남녀 평등한 대표성에 관한 법(Organic Law 2/2024, of August 1, on equal representation and balanced presence of women and men)을 도입했다. 일명 성평등법(Parity Law)이라고도 칭하는 이 법은 정치 및 경제 분야에서 성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본 원고에서는 해당 법의 제정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이번에 발효된 스페인의 성평등법은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 내 의사결정기구가 어느 한 성별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특정 성별(대개 남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하거나 다른 성별의 비율이 40% 이하로 떨어지서는 안된다. 공공분야로는 정부 부처, 입법 및 사법기관, 공영 방송국 등이 해당된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선거후보자 명부에서 성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주요 추진 분야 중 하나이다. 앞으로 스페인에서 치러지는 모든 선거에서 각 정당은 후보자 명부에 남성과 여성을 번갈아 지명하는 일명 '지퍼형 명부(zipper list)'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한국의 공직선거법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시 50% 이상을 여성으로 하고 후보자 명단의 홀수 자리에 여성을 할당해야 한다는 규정과 유사하다. 또한, 인구 3천 명 미만을 둔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인구를 고려하여 의사결정기구 구성 시, 위에서 언급한 성별 비율 보장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 명부에서 남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
- 민간 분야는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직군별 이해단체나 비즈니스 협회, 노동조합도 포함한다. 2026년 6월 30일까지는 스페인 주식시장(IBEX) 시가총액 기준 상위 35개 상장

5) 박서희, 레이든 대학교 정치학과 강사

기업에 적용된다(법 시행일 기준 종가로 결정). 그리고 2027년 6월 30일까지는 나머지 모든 상장 기업에 적용된다.

- 이번에 발효된 성평등법은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지침(Directive (EU) 2022/23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November 2022 on improving the gender balance among directors of listed companies and related measures)을 기반으로 마련되었다. '의사결정직 성별 균형 개선을 위한 지침' 이라고도 불리는데, 유럽연합 내 상장기업의 의사결정을 맡은 고위직 임원의 성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지침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유럽연합 내 모든 상장기업의 경우 비상임 이사에 해당하는 직급(non-executive director positions)의 40% 또는 기업 내 모든 이사 직급(all director positions)의 33%는 소수를 차지하던 성별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질적으로 소수 성별은 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기업은 성별 대표성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 및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 측에서 벌금 및 시정에 관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본 지침의 내용은 상장 기업에 적용되고, 유럽연합이 기존에 수립한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예외이다(예, 근로자 수 250명 이하, 연 매출 5천만 유로 이하 등). 스페인은 이러한 유럽연합의 지침을 국내법에 도입 및 이행하기 위해 성평등법을 추진하고 발효한 것인데, 오히려 스페인의 법이 유럽연합(EU)의 지침보다 적용 범위가 더 넓고 세부적인 의무조항 내용들을 추가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 본 법은 앞서 소개한 정치 및 민간분야 의사결정직 내 성별 균형 외에도 각종 스포츠 종목 협회나 리그에서 성희롱을 예방하고 성희롱 자체를 중대한 사안으로 인지하는 프로토콜(protocol)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또한 여성 선수의 임신 및 출산 동안 계약을 연장하는 내용과 같이 모성 관련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일부 제도를 개정했다.
- 이번에 발효된 성평등법의 성비 할당에 관한 의무 조항을 두고 스페인에서는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찬성 입장은 이러한 제도적 틀을 도입해야 아직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동안 의사결정직과 같은 높은 직급에서 여성 대표성이 낮았고, 자연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제도적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면 향후 다른 국가에도 좋은 정책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 반면 반대 입장은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 명부 작성, 기업 이사회 임원 임명 과정에서 할당된 비율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성별을 기반으로 적임자를 고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역효과가 날 수 있고, 제도가 사회에 성별 균형을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본 법에 반대하는 측은 이러한 강제성이 되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정한 성평등 실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본 법이 8월부터 시행된 만큼, 앞으로 스페인 정치,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이행되는 방식과 그 결과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Euro Weekly News (2024.8.23.), "Spain introduces the Parity Law to address gender inequality in the country", <https://euroweeklynews.com/2024/08/23/spain-introduces-the-parity-law-to-address-gender-inequality-in-the-country/> (접속일: 2024.10.22.)
- European Union (2022), "Directive (EU) 2022/23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November 2022 on improving the gender balance among directors of listed companies and related measure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2L2381> (접속일: 2024.10.22.)
- State Agency for the Official State Gazette (스페인 관보 웹사이트), "Ley Orgánica 2/2024, de 1 de agosto, de representación paritaria y presencia equilibrada de mujeres y hombres (Organic Law 2/2024, of August 1, on equal representation and balanced presence of women and men)", https://boe.es/diario_boe/txt.php?id=BOE-A-2024-15936 (접속일: 2024.10.22.)

호주 빅토리아 주 성·재생산 건강 정책 현황과 문제점⁶⁾

- 호주 빅토리아주(멜버른 소재)는 수년간의 개혁과 투자 덕분에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정책 및 시행에 있어 호주에서 가장 선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24년 10월 31일 발간된 〈Women's Health Victoria〉(이하 'WHV')의 보고서 'Realising Access'는 빅토리아 주 지역별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 접근성의 불평등을 조명하였다.
- 이 보고서는 빅토리아 주의 낙태, 피임, 성 건강 정보를 비롯해 이를 연계하는 서비스인 1800 My Options(한국의 1577, 1588 같은 개념)에 2018년부터 5년간 접수된 약 3만 건의 전화 데이터를 분석하여 여성이 겪는 불평등을 확인하였다.
 - 보고서는 'postcode lottery'라고도 불리는 지역 의료 불평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멜버른 같은 대도시에서 취약 계층이 특히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지방 소도시 등은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의 제공이 부족하고, 자궁 내 피임장치(IUD)와 같은 장기 지속형 피임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진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 WHV의 셸리 하슬러(Sally Hasler) 대표가 언급한 사례를 보면, 임신 10주 차에 1800 My Options에 전화한 한 여성은 예약 후 3주를 기다린 후에야 일반 의사(GP)를 만날 수 있었는데, 의사는 낙태를 위해 멜버른으로 가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그러나 이 여성은 의사가 추천한 병원의 수술 비용인 800호주달러를 감당할 수 없었고, 왕복 680km의 기름값도 부담스러워 1800 My Options에 도움을 요청했다. 담당 상담사는 무료 수술비 지원 방법을 안내했으며, 결국 이 여성은 왕복 460km 거리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
 - 또한 보고서에서는 외과적 낙태 비용은 의료 복지 카드(Medicare) 소지자의 경우 740호주달러(약 67만 원), 미소지자는 1185호주달러(약 107만 원)에 달하여 저소득층 여성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임신 중인 사람 중 가정 폭력 피해자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최근 호주로 이주한 이주민이나 임시 비자 소지자는

6) 조혜인, 모내시대학교(Monash University) 한국학과 조교수·젠더와 가정폭력예방센터 책임연구원

더욱 접근성이 떨어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한편, 일부에서는 낙태가 의료 서비스로 분류되지만, 다른 의료 서비스와는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하였다.
 - 예를 들어, 공공병원은 해당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고, 약국은 낙태약을 비치해야 할 의무가 없다. 또한 주(states)와 준주(territories)마다 의료법과 정책을 각각 관리하고 있어 규정이 조금씩 다르다. 빅토리아 주에서는 약물적 낙태는 임신 9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외과적 낙태만 가능하다. 보고서는 외과적 낙태가 필요한 사람은 늘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진은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 해당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모든 사람이 진정한 성·재생산 건강 관련 의료 서비스에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일회성 보고서에서 벗어나 서비스 이용자 동향, 서비스 제공 격차, 이용자 경험 및 접근성 장벽 분석 등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체계 구축
 - 빅토리아 주 전역의 서비스 접근성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 및 경제적·사회적 취약 지역을 포함한 서비스 확대

• 참고문헌 •

- Hasler, S. (2024). Abortion is legal in Victoria, but for many, it's out of reach. Women's Agenda. <https://womensagenda.com.au/latest/abortion-is-legal-in-victoria-but-for-many-its-out-of-reach/>
- Sarder, M., Mogharbel., & C, Kalman., T. (2024). Realising access: abortion and contraception inequities and enablers in Victoria. Women's Health Victoria. <https://www.whv.org.au/resources/whv-publications/realising-access-abortion-and-contraception-inequities-and-enablers>

영국, 여성 스포츠 산업 성장을 위한 투자 가속화 제도 본격 도입⁷⁾

- 영국 정부는 여성 스포츠의 기초 수준을 강화하고, 여성 운동선수의 성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 스포츠 투자 가속화 제도(Women's Sport Investment Accelerator Scheme)'의 본격적인 시행을 발표했다.
- 이 제도는 여성 스포츠 업계에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경로 개발, 투자 정보 제공, 스폰서십 및 스포츠 업계 간 연결을 지원하고, 여성 스포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상업적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영국 정부의 이번 제도 도입은 여성 스포츠에 대한 스폰서십과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여성 스포츠 전반에 걸친 경력 개발 기회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7) 이지원,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 개발보건학 석사

- 체육부 장관 스테파니 피코크(Stephanie Peacock)는 “영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성장한 여성 스포츠를 생활 체육 수준(Grass root sports)에서부터 엘리트 수준까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번 제도의 도입은 여성과 여성 청소년들이 신체 활동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스포츠 분야에 진출하려는 꿈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제도 개요
 - 역사적으로 영국의 여성 스포츠는 남성 스포츠에 비해 자원, 스폰서십, 발전 경로가 제한되어 있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따라 ‘여성 스포츠 투자 가속화 제도’는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 생태계를 구축하고, 여성 스포츠를 상업적으로 성장 가능한 분야로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 해당 제도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년간 시범 제도로 운영되어 스포츠 업계, 투자자, 브랜드 협력사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2024년부터는 기존 엘리트 리그뿐 아니라 생활 체육 스포츠 수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시설, 코칭 및 커뮤니티 참여를 개선하기 위한 도구와 자원 제공을 통해 일반 대중의 여성 스포츠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가시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 해당 제도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여성 리그와 대회를 위한 더 나은 상업적, 재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지역 클럽에서 엘리트 리그에 이르는 협력 경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 스포츠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함으로써 정부가 모든 부문에서 여성 운동선수를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여성의 참여 확대와 코칭 강화를 통해 그동안 자원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온 스포츠계에서 여성과 여성 청소년을 위한 지원의 문을 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영국 산업통상부(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는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Deloitte)와 협력하여 시장 통찰력 제공 및 네트워킹 기회 창출을 통해 여성 스포츠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해당 사업 기간의 여성 스포츠의 기대 가치는 10억 파운드(한화 약 1조 769억 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 성평등 증진과 여성 스포츠의 사회적 영향
 - ‘여성 스포츠 투자 가속화 제도’의 근본적인 이점은 여성 스포츠팀의 가시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젊은 여성과 여성 청소년이 스포츠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특히 엘리트 여성 리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 여성 스포츠의 전반적인 지위가 향상되고, 이를 통해 여성 운동선수들이 이전에 기회가 제한되었던 분야에서 경력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여성 운동선수는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규범, 여성 스포츠에 투자를 꺼리는 환경, 여성 롤모델 부족 등 수많은 요인에서 추가적인 장벽에 직면해 있다. 여성 스포츠에 대한 투자 증가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부정적인 사회적 규범 및 자원 부족으로 인해 직면했던 여성들의 장벽을 허물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한 성별 간 연봉 격차 완화와 긍정적 롤모델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 여성 스포츠 산업은 2030년까지 상승 기류를 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초 여성 스포츠

는 여전히 자원 분배와 대중적 지원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번 제도로 창출된 투자 기회가 주요 도시와 엘리트 팀에 한정되지 않고 소규모 기초 프로그램에까지 지속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GOV.UK (2024.10.23.), "Government pledges to make UK 'top destination for women's sport investment' following record-breaking summit",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pledges-to-make-uk-top-destination-for-womens-sport-investment-following-record-breaking-summit> (접속일: 2024.11.16.)
- Spond (2024.11.8.), "Women's Sport Investment Accelerator: A Boost for Grassroots Women's Sport", <https://www.spond.com/news-and-blog/womens-sport-investment-accelerator/> (접속일: 2024.11.16.)
- UN Women (2024.7.31.), "Creating holistic change in women's sports through investment", <https://asiapacific.unwomen.org/en/stories/feature-story/2024/07/creating-holistic-change-in-womens-sports-through-investment> (접속일: 2024.11.16.)

이탈리아, 육아휴직 제도 일부 개정 및 시행⁸⁾

- 이탈리아는 2024년 예산법(Budget Law)에서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은 2019년 유럽연합이 채택한 「부모 및 돌봄 제공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지침(Directive EU 2019/1158)」을 국내법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1년 제정되었던 모성 및 부성 지원법(Legislative Decree No. 151/2001, Consolidated Maternity and Paternity Support Law)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이탈리아의 육아휴직 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산휴가
 -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는 현행 제도에서 크게 변경된 부분이 없이 유지된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둔 남성 근로자는 5개월간의 의무 휴직 기간이 주어지고, 임금의 80%를 받는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자녀 출산 시 7일간의 임금 100%를 받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생후 5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 육아휴직
 - 고용된 근로자 부모는 자녀 한 명당 최대 10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아버지인 남성 근로자가 연속으로 또는 최소 3개월 이상 부분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최대 11개월까지 가능하다.
 - 육아휴직은 자녀가 12세가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성 근로자는 최대 6개월의 육아 휴직을, 근로 남성은 최대 6개월(연속으로 또는 최소 3개월 이상 부분적으로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7개월까지 가능)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 그리고 각 부모 근로자에게는 서로 양도 불가능한 3개월의 육아휴직이 주어지며, 임금의 30%를 받는다. 그리고 자녀가 6세가 될 때까지 부모 중 한 명은 육아휴직

8) 박서희, 레이든 대학교 정치학과 강사

중 최대 2개월 동안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첫 1개월은 임금의 80%, 나머지 1개월은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 2024년에는 이 비율이 첫 두 달 모두 임금의 80%로 상향되었다. 즉,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23년 12월 31일 전 사용 완료했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 기간 중 2개월간 본인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예산법에 따르면 2025년부터 다시 유급 육아휴직 급여 비율이 변경된다. 2025년부터는 1개월간 임금의 80%, 1개월간 임금의 60%, 이후 추가 7개월간 임금의 30%, 2개월간 임금의 30%(임금이 최소 연금 누적 금액의 2.5배 이하인 경우에 한함)를 받는 것으로 변경된다.

■ 사회보장기여금 면제

- 이 밖에도 2024년 이탈리아 예산법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에게는 사회보장 기여금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⁹⁾ 해당 혜택은 최대 연간 3,000유로까지 사회보장기여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적용된다.
- 본 제도는 정규직, 시간제 근로 등 고용주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근로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행되는 제도이다.
- 해당 제도는 2024년을 우선 시범 이행기간으로 지정하고, 2024년에 한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들에게도 해당 혜택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가장 어린 자녀가 만 10세가 될 때까지 사회보장 기여금을 면제하는 등 조금 더 폭넓게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 양육수당

- 이탈리아에서는 0-3세 자녀를 둔 가족을 위한 양육수당 제도(Childcare Bonus, Bonus Asili Nido)를 실시하고 있다. 자녀를 공인된 공립 또는 민간 보육시설을 보내고 있거나, 자녀가 심각한 만성 질병을 앓고 있어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 양육비용에 관한 증빙서류나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수당이 지급된다. 이탈리아 사회보장공단(Istituto Nazionale della Previdenza Sociale, INPS)에서 지원서 접수, 심사 및 수당 지급을 관할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소득평가지수(ISEE)에 따라 상이하다.¹⁰⁾
- 2024년에는 예산법에 의거하여 양육수당 적용 범위와 금액이 변경되었다. 이미 10세 이하 자녀가 최소 1명 이상 있으면서 2024년 태어난 자녀가 있고 소득평가지수(ISEE)가

9) 이탈리아의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Contributi Previdenziali)은 노동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납부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 공제된다. 해당 기여금은 주로 건강보험, 연금, 실업보험 등 국가의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의 재정적 자원으로 사용된다.

10) 이탈리아의 소득평가지수(ISEE, Equivalent Economic Situation Indicator)는 가구별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 경제 상황 지표다. 가구의 소득, 자산, 구성원 등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계산하며, 해당 지표는 각 가구가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각종 사회 복지 혜택을 받는 데 있어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차등 지급할 때 활용된다. 소득평가지수 값이 낮을수록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구라는 의미로, 그만큼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령할 수 있는 금액도 증가한다.

40,000유로 이하인 가정에는 지급되는 수당 금액이 연간 최대 3,600유로로 늘어났다. 소득평가지수(ISEE) 값이 40,001유로 이상인 가정이거나 아예 소득평가지수(ISEE) 값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정은 연간 최대 1,500유로를 받을 수 있다. 공단 측의 심사로 결정된 수당 금액은 보육시설 비용을 부담한 부모 측에 월 일정 금액이 분할 지급된다. 만성 질병으로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가정인 경우는 약간 다른 소득평가지수별 상한 금액과 지급방식을 적용한다.

- 부모인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탈리아 사회보장공단 (INPS)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와 혜택에 관해 상담할 수 있는 공단의 상담센터인 MCC(Multichannel Contact Centre),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무료로 사회보장 및 연금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Patronato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는 출산휴가 시작 전에, 그리고 육아휴직 대체 급여 기간이 종료된 후 최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이탈리아에서 올해 개정된 유급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를 둔 부모 근로자들에게 보육과 관련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도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유급 육아휴직 기간과 비율의 점진적 확대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Buone Notizie (2024.3.28) "Congedo parentale: le novità del 2024 per il sostegno alle famiglie (Parental leave: what's new in 2024 to support families)", <https://www.buonenotizie.it/attualita/2024/03/28/congedo-parentale-le-novita-del-2024-per-il-sostegno-alle-famiglie/caterina-poli/> (접속일: 2024.11.21.)
- European Observatory (2024.6.3.) "Recent Italian policies target the issue of low birth rates", <https://eurohealthobservatory.who.int/monitors/health-systems-monitor/updates/hspm/italy-2023/recent-italian-policies-target-the-issue-of-low-birth-rates> (접속일: 2024.11.21.)
- Il Sole 24 Ore (2024.10.17) "Manovra 2025, arriva un nuovo bonus bebè: ecco chi ne ha diritto e come funziona (Budget 2025, a new baby bonus is coming: here's who is entitled to it and how it works)", https://www.ilsole24ore.com/art/arriva-nuovo-bonus-bebe-chi-ne-ha-diritto-e-come-funziona-AGxv6aa?refresh_ce=1 (접속일: 2024.11.21.)
- INPS (2024.11.8) "Maternity and paternity leave allowance", <https://www.inps.it/it/en/inps-comunica/diritti-e-obblighi-in-materia-di-sicurezza-sociale-nell-unione-e-per-i-cittadini/presenzioni-per-congedi-a-tutela-della-maternita-e-paternita.html#:~:text=If%20you%20are%20an%20employed%20parent%2C%20you%20can%20take%20leave,the%20family%20or%20arrival%20in> (접속일: 2024.11.21.)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국내*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51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311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 2023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사업 등 총 27,843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전체 과제 중 7,501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정책개선을 추진한 과제는 7,024건(93.6%)으로, 이 중 3,789건을 개선 완료하여 정책개선 이행률이 전년보다 4.2%p 향상
 - 2023년도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주요 정책개선 사례에서 기획재정부는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월 10만원→20만원)를 상향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8.27]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10116

여성가족부, 2025년 예산안 발표

- 여성가족부는 2025년 예산안을 2024년 1조 7,234억 원 대비 5.4% 증가한 1조 8,163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힘.
 - 2025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돌봄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과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보호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약자 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내동향」 중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주요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임.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8.29]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10128

여성가족부,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발표

- 여성가족부는 제29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여 남녀의 모습을 부문별로 분석한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발표
 - 2023년 1인 가구는 782만 9천 가구로 일반 가구의 35.5%를 차지하며 2015년 520만 3천 가구 대비 50.5% 증가했고, 남성 1인 가구는 30대(21.8%), 여성은 60대(18.6%)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1.4%로 2015년 55.7% 대비 5.7%p 상승했고, 특히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은 71.3%로 2015년 59.6% 대비 11.7%p 상승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9.05]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10142

여성가족부, 2023년 성별 임금 격차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시대상 회사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등 조사 결과 발표
 - 2023년 공시대상 회사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9,857만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7,259만원으로 공시대상 회사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 임금 격차는 26.3%로 나타남.
 - 성별 임금 격차는 2022년(30.7%) 대비 4.4%p 감소했으며, 2023년 공시대상 회사의 남녀 평균임금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특히 여성임금 상승폭이 남성임금 상승폭보다 더 커, 성별 임금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9.05]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10143

여성가족부,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여성가족부는 2025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한부모가족 주거 제공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예산 신규 반영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 여성가족부의 202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이 신설되는 등 2024년 5,441억 원보다 460억 원(8.5%) 증액된 총 5,901억 원 편성
 - 여성가족부는 2025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한편, 학용품비 지원 대상과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지원할 계획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9.09]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148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법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통과

-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이번 개정안은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하고,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제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9.2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PlbIT-VtpPswy9nlt8xkyP1e.mogef21?mid=news405&bbtSn=710172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

- 지난 2024년 3월 26일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9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이행관리원이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에서 별도 기관으로 분리 독립
- 이행관리원이 분리 독립함에 따라 양육비 지급과 회수를 위한 구상소송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되며, 이행관리원은 '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 등 선지급제 집행 업무 담당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9.25]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173

여성가족부, '2024 대한민국 양성평등 토론회' 개최

- 여성가족부는 '미래산업과 양성평등'을 주제로 「2024 대한민국 양성평등 토론회(2024 Korea Gender Equality Forum : KGEF)」 개최
- 이번 토론회는 국제기구와 학계, 기업, 시민사회와 함께 양성평등 관점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 및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주요 의제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9.26]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7UvactCetOzv9lACfQNYl6H+.mogef11?mid=news405&bbtSn=71017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 개정안에는 선지급금 회수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인 명단공개 시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9.26]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sessionId=7UvactCetOzv9lACfQNyl6H+.mogef11?mid=news405&bbtSn=710181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가족부는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힘.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 강요한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 강화
-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삭제 지원 주체를 현행 국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9.26]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sessionId=7UvactCetOzv9lACfQNyl6H+.mogef11?mid=news405&bbtSn=710182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

- 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힘.
-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77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되었으며,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임.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 10. 21]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212

여성가족부, 2023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2023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함.
- 점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예방교육 참여율은 93.7%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교육 부진기관은 68개소 감소하였음. 또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율도 99.2%로 전년 대비 2.4%p 상승하여 제도 실효성이 지속적으로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남.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 10. 16]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207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지자체 및 교육청 등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점검·확인결과에 대한 공개방법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개선된다고 밝힘.
-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지자체, 교육청 등이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임.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 10. 16]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207

여성가족부, 정부의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공유

-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함.
- 정부는 출범 이후 한부모가족·위기청소년 지원 등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에 주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등 중요 현안 대응과 함께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저출생 극복과 약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 11. 14]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259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제공, 법률지원, 가정방문서비스 등의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위기임산부 등 미혼모가 병원 외 장소에서 출산 시 또는 미혼부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기 위해 출생 확인 신청 시 필요한 법률지원 및 유전자 검사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생계, 양육 및 학업 등의 삼중고를 겪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 학업중단 현황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조사하고, 학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안정적 양육환경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 확대 등 추진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 11. 14]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176

여성가족부, 2025년 예산 확정

- 여성가족부는 2025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이 2024년 1조7,234억 원 대비 3.2%(543억 원) 증가한 1조 7,77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힘.
- **(양성평등 및 권익보호)**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확대, 훈련수당 신설, 새일인턴 고용장려금 확대, 기업 다양성 교육 확대, 신종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등
- **(청소년 지원)**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신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대 등
- **(가족 지원)** 아이돌봄 수당 인상, 한부모가족 양육비 단가 인상,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설 및 선지급제 도입 등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 12. 11]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30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방안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힘.
- 보건복지부는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연속혈당측정기(연속혈당측정용 전극)를 신규 지원

-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하여 2024년 11월부터는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
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
로 인하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09.26]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3215&tag=&nPage=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발간·배포

-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힘.
- 매뉴얼은 일·가정 양립과 일·생활 균형이 기업 경쟁력 확보와 저출생 해소의 방안
중 하나로 관심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모르거나 인사노무관리 부담으로 도
입을 망설이는 기업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로 발간함.
- 매뉴얼에는 유연근무 도입과 도입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제도운영의 방법,
적합모델,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2024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인 임신·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최신 법 개정사항이 미리 수록되어 있어 현장의 빠른 제도
안착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4. 10. 24]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176

[교육부]

교육부, 학교 뱃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 구성·운영

- 교육부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뱃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긴급 전담조직(TF)
운영
-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학교 뱃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
하고, 분야별 6개팀(7개과)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운영하는 한편, ▲학교 뱃페이크 관
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할 방침

• 참고문헌 •

[교육부 보도자료, 2024.08.28]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065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2&s=moe&m=020402&opType=N>

교육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2차 조사결과 발표

-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허위합성물 피해 관련, 학생·교직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피해 현황을 조사·발표
 - 2024년 1월부터 9월 6일까지 피해신고는 434건, 이 중 수사의뢰 건수는 350건, 삭제 지원 연계는 184건, 피해자는 617명(학생 588명, 교사 27명, 직원 등 2명)으로 집계

· 참고문헌 ·

[교육부 보도자료, 2024.09.09]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095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딥페이크(Deepfake) 불법 콘텐츠 분석 등 데이터 분석 과제 추진

-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정책결정과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5개 분야 12건의 데이터 분석과제를 선정해 데이터 분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민안전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 분석모델’ 개발이 이뤄지며, 가짜뉴스와 디지털 성범죄 등 불법 합성 콘텐츠로 인한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영상의 딥페이크 적용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 개발

· 참고문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4.10.09]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lId=11291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임신·출산 지원 관련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며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구체화·보완함.
 - 주요 보완 대책은 임신초기 유·사산휴가 확대(5→10일) 및 배우자 유·사산휴가(유급 3일) 신설, 임신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근거 마련, 난임시술 의료비지원 강화 등 임신·출산가구 지원 강화 등임.

· 참고문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4. 10. 30]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387&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S>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 발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의향 및 태도,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등을 조사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함.
- 2024년 3월 같은 조사보다 9월 조사결과,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졌으며, 저출생 대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일·가정 양립' 분야로 나타남.

· 참고문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4. 10. 21]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375&listLen=20&searchKeyword=&position=M>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4~44세 유자녀 부부 저출생 대책 모니터링 결과 발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대책의 효과성과 체감도 평가 및 정책 보완 사항 발굴 등을 위해 24~44세 유자녀 부부(1자녀 및 2자녀 이상 가구 81명), 신혼·임신준비부부/미혼청년이 참석한 정책토론회를 각각 개최함.

[24~44세 유자녀 부부 모니터링 결과]

- 토론회 참석자 중 다수의 지지를 받은 BEST 저출생 정책은 ▲(일·가정 양립) 유연근무(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제, 재택근무) 활용 제도화 등 선정, ▲(영유아·초등돌봄) 유치원 어린이집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기본8h+추가4h), ▲(양육부담 경감) 사고육 없는 지역학교 지정·운영 및 놀이영어 프로그램 확대 등임.
- 대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보완 방안으로는 ▲(일·가정 양립)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자녀 양육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 등 제안, ▲(영유아·초등돌봄) 보편적 돌봄정책 지원, 정부차원 통합 관리·감독체계 마련, ▲(양육부담 경감) 다자녀 혜택 1자녀 확대,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 확대 등이 제안됨.

[신혼·임신준비부부/미혼청년 모니터링 결과]

- 토론회 참석자 중 다수의 지지를 받은 BEST 저출생 정책은 (결혼 지원) 결혼 특별세액 공제 신설, (주거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 (임신·출산·난임치료 지원) 25~49세 모든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육아휴직급여 인상(월 150만원→250만원) 및 수요 높은 시기 집중지원 선정 등임.
- 대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보완 방안으로는 (결혼 지원) 결혼 준비에 필요한 지출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등 지급, (주거 지원)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 요건 지속 완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신·출산·난임치료 지원) 산후조리원 비용 공개 및 관리·감독 강화, (일·가정 양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동료의 보상(현 20만원) 확대 등이 제안됨.

· 참고문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4. 11. 4.]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390&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M>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4. 11. 11.]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394&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M>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용상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 방안 논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한국인사관리학회는 '차별없는 일터: 고용상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을 주제로 제5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공동 개최함.
- 인구위기 상황의 생산연령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대안인 만큼 여성경제활동 참가 확대를 위해 성별임금격차, 경력단절, 유리천장 효과 등 노동시장 내 차별적 요소 제거 강조
- 고용상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의 변화,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는 제도개선과 지원, 사회전반의 인식 변화 등 세 가지 측면 강조

• 참고문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4. 11. 20]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399&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M>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민WE원회 저출생 대책 평가 및 인식 조사 결과 발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민WE원 및 청소년·청년WE원 대상 저출생 정책 평가 및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표
- 조사결과, 2024년 10월 발족 및 토론회 이후 국민WE원회의 저출생 정책 관심도는 5.5%p, 인지도는 22.5%p, 신뢰도는 25.0%p 상승, 저출생 문제의 해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24.5%p 증가하는 등 긍정적 인식 확대 확인

• 참고문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4. 11. 28]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40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가족 친화적 공향 조성 방안,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저출생대책 이행점검결과 및 성과지표, 인구위기대응 T/F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함.
- 다자녀 가구 주차 요금 50% 감면 혜택 기준을 막내 나이 만 15세에서 만 18세로 상향
- 남성 맞돌봄 문화 및 일·육아 병행환경 조성
 - 여성(30~44세) 경력단절 비율을 절반 이하로 단축 (2024)22.3%→(2027)15.0%→(2030)10.0%
 -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 (2022)6.8%→(2027)50.0%→(2030)70.0%

• 참고문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4. 12. 3]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407&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M>

[관계부처 합동]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발표

- 정부는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주요내용을 발표함.
- 2024년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후, 정부는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시급한 입법·행정조치 등을 우선 실시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마련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에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 11. 6.]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10244